

연구논문

부패방지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 인 중*
김 영 우**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 결과
- V. 결 론

〈 요약 〉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들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정치적인 구호 차원의 상징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발·처벌 위주의 사후적 부패통제 정책에서 사전 예방적인 부패방지 정책으로 진화·발전하였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제도의 집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변수를 일반적인 정책집행 영향요인과 부패방지 정책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집행변수인 정책내용,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 집행조직, 정책대상 집단, 정책환경이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내용,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 관련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내용의 현실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부패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는 내생변수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노력과 인센티브 부여 등 집행지원을 강화하면 정책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부패, 부패방지정책, 집행조직, 정책집행]

I. 서론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패문제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폐

* 주저자,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kywoo@uos.ac.kr).

해를 강조하고 부패방지 정책이나 반부패 대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해왔다. 부패방지 정책들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정치적인 구호 차원의 상징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점차 다양해지고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은 그 동안 적발·처벌 위주의 사후적 부패통제 정책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전 예방적인 부패방지 정책으로 진화·발전하였다. 2002년에는 부패방지 시책 수립·평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부패방지 교육·홍보,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반부패정책 추진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켜 부패의 사전예방에 주력하면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부패방지위원회를 승계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결과(2010)에 따르면 아직도 응답자의 56.6%가 우리나라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인식도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패문제는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경제활동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투자활동을 위축 시키는 등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Rose-Ackerman, 1977 : 31-60). 국제사회에서도 OECD 뇌물방지협약과 UN 반부패협약을 통해 부패문제의 국제적 이슈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부패한 국가는 무역 등 국가 간 상호작용에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부패문제의 해결 없이는 어떠한 국가도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요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패문제의 해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국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패방지 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패방지 정책의 집행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부패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행정통제적인 시각에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역대정부의 부패통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부패방지 정책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김상현, 2000: 129-141), 부패방지 법·제도의 집행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김종무·윤수재, 2004).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부패방지 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경험적·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부패방지 정책집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요인을 도출한 후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의 효과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부패방지 정책

부패방지 정책의 목표는 부패방지정책의 근거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청렴한 공직풍토 및 투명한 사회의 조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렴한 공직풍토 및 투명한 사회의 조성은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부패비용의 증대, 통합성 제고 등 3가지 하위목표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첫 번째 목표인 부패유발 요인의 제거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서비스의 공급자 중심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설명하였다. 관료들이 부패에 개입하는 경로를 밝혀내고 이를 차단하는 것이 부패통제의 주요 관심사였다. 공직자가 부패에 개입하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직권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권리나 이익을 합법적으로 변경시켜 주거나 인·허가 업무처리 시 행정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챙기는 경우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공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부패의 원천 역할을 한다고 간주하고 재량권을 축소하거나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패개입 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행정서비스의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와 관련해서도 부패유발 요인은 존재한다. 각종 법령의 준수 용이성은 수요자 입장에서의 부패유발 요인이다. 법령 준수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과 법령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적정하지 않으면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패행위와 같은 다른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패유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부패유발 요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행정절차의 투명성이다. 행정절차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절차의 접근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부패방지 장치의 구비여부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으로 부패영향 평가와 제도개선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는 부패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부패비용이란 부패행위자가 부패개입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부패로 인해 예견되는 비용은 적발될 확률과 유죄선고를 받을 확률 그리고 부과될 형벌을 곱한 것(적발될 확률 $\times$ 유죄선고 받을 확률 $\times$ 형벌)으로 정의할 수 있다(Rose-Ackerman, 1997: 57). 따라서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확률, 유죄선고를 받을 확률 및 형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부패비용의 증가 또한 부패행위를 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패의 편익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를 부패로 유도하려는 민간부문 부패행위자에게도 부패의 비용이나 위험을 증가시키는 정책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부패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부패적발 확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대표적이다. 부패신고 의무화 또한 부패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세 번째 하위목표는 통합성의 제고이다. 정책을 결정하거나 목표를 설정할 때 다수의 관련자가 참여하면 결정된 사항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직과 사회의 일체감과 통합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이나 사회의 목표는 구성원들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부패문제는 그 특성상 은밀성과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구성원 사이에 부패방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된 이후에 자율적으로 반부패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 중 통합성과 반부패의식을 제고할 목적을 가진 대표적인 정책이 행동강령이다. 행동강령은 외부의 타율적인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인 실천에 기초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라는 사회적 목표는 공무원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공무원의 윤리의식은 한 사회 전체의 시민의식의 하위부문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깨끗한 시민의식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자의 건전한 윤리의식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반부패의식 제고를 위해 반부패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부패방지 정책집행의 영향요인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로 Smith(1973), Van Meter·Van Horn(1975), Edwards(1980), Mazmanian & Sabatier(1985)를 들 수 있다. Smith(1973)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상화된 정책(idealized policy), 정책대상 집단, 집행조직, 환경적 요인 등 네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Van Meter와 Van Horn(1975)은 정책집행의 주요변수로 정책의 목표와 기준, 가용자원, 조직간 관계, 집행기관, 경제·정치·사회적 환경, 집행자의 성향 및 반응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면서 정책집행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집행자의 성향을 들고 있다. Edwards(1980)는 「정책의 집행」(Implementing Public Policy)이라는 저서에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으로 집행담당조직의 내부구조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자원, 성향, 관료제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요인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정책집행의 효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Mazmanian과 Sabatier(1983)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요인에 대한 경험적·체계적 연구를 종합·정리하여 방대하고 포괄적인 요인들을 제시하였는데,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의 추적 가능성, 정책 결정의 집행구조화 능력,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게 정책내용 변수, 집행조직 변수, 환경 변수로 범주화할 수 있다.

부패방지 정책의 영향요인은 정책내용, 집행조직, 환경 등 일반적인 정책집행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부패방지정책 집행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정책의 집행체계가 일반적인 정책집행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패방지 정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패 영향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다른 기관에게 부패 영향평가

를 위한 자료 협조를 받아야 하며, 종국적으로 부패 영향평가의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는 것도 다른 공공기관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역시 다른 공공기관의 협조 없이는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후 해당기관이 이를 소관법령에 반영해야 비로소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제도개선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한 합의도출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특히, 신고사건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건의 사실여부만 검토하고 사건의 처리는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정책집행에서 총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의 기관이 집행조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조직 간 의사전달 및 집행활동을 위한 협조가 중요시 되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집행활동에 집행기관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집행지원이 정책집행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부각된다.

부패방지 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또 다른 특징은 정책 집행자가 동시에 정책집행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행동강령의 경우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집행하면서 집행자 자신 및 집행자가 속한 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동료 공무원이 정책집행의 대상자가 된다. 부패영향 평가도 공무원이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대상자도 공무원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일단은 공무원이 일차적으로 권고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패방지 정책집행에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자는 정책집행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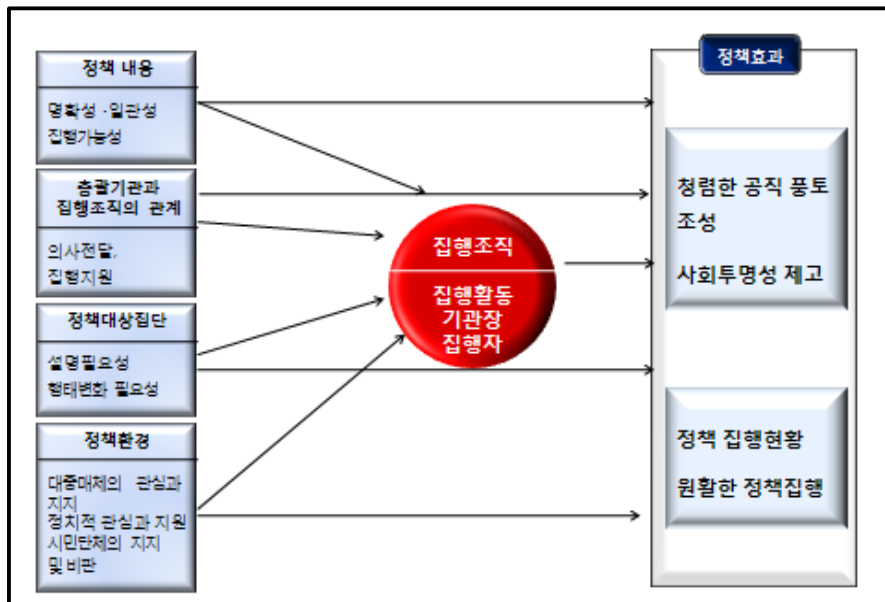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 부패방지정책 집행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패방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내용, 총괄기관과 집행조직 간의 관계, 집행조직, 정책대상 집단, 그리고 정책환경

등 5가지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 중 정책내용, 총괄조직과 집행조직 간의 관계, 정책대상 집단, 그리고 정책환경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집행조직은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1) 변수의 선정 및 측정항목

(1) 정책내용

정책내용의 측정지표로 명확성, 일관성, 실현가능성을 선정하였다. 정책내용의 명확성이란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까지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명확성은 정책집행 담당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수립한 담당자에게 정책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문의를 요청할 필요성으로 정의하고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내용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정책내용의 일관성이란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각각 또는 그 조합이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을 정책 집행 담당자가 정책의 내용이나 지침의 변경으로 인해 정책을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설문에 반영·측정하였다.

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외에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책내용의 소망성보다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부패방지 정책집행의 성공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행가능성을 정책내용이 현실적이어서 정책대상 집단에게 무리 없이 수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설문에 반영하여 측정하였다.

(2) 총괄기관과 집행조직 간의 관계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는 두 가지 측정지표를 통해서 측정한다. 첫 번째 측정지표인 의사전달의 효율성은 부패방지 정책집행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집행조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전달과 사전협의의 의미한다. 두 번째 측정지표인 집행지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책집행을 위한 기술적 조언과 자문 그리고 부패방지 정책의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포상 및 선진외국 시찰 등 인센티브의 부여가 있다.

(3) 정책대상 집단

부패방지 정책대상 집단이란 부패방지 정책의 집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이와 관련된 측정지표는 정책대상 집단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정책대상 집단에게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도이다.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정책대상 집단이 부패방지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집행자가 정책대상 집단에게 부패방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통해서 측정한다. 정책대상 집단에게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도는 부패방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대상집단의 기존 행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4) 정책환경

부패방지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 환경과 관련된 측정지표로 대중 매체의 보도 및 관심, 정치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부패문제의 사회 이슈화에 기여한 시민단체의 지원 및 비판을 선정하였다.

(5) 집행조직

부패방지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집행조직과 관련된 측정지표는 크게 집행활동, 집행기관의 기관장, 집행자의 특성으로 구분해서 고찰 할 수 있다. 집행활동이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 및 부패영향 평가 등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자료제출 그리고 부패영향 평가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를 소관기관의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이 크면 성공적인 부패방지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설문을 통하여 측정한다. 집행자와 관련한 측정지표는 집행자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태도, 집행에 대한 의욕, 그리고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6) 정책효과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투명성 제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부패방지 정책 집행성과의 만족도를 측정지표로 사용한다.

〈표 1〉 측정변수와 지표

측정변수	측정치표
정책내용	명확성, 일관성, 집행가능성
총괄기관과 집행조직 간의 관계	의사전달의 효율성: 지침안내, 사전 협의
	집행지원: 조언, 자문 및 인센티브 지원
집행조직	집행활동: 집행기관 법령 반영 등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집행자: 집행의욕, 태도, 능력
정책대상 집단	정책 설명 필요성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도
정책환경	정치적 관심과 지원, 여론의 반응, 시민단체의 관심과 지원
정책효과	투명성 및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원활한 정책집행 만족도
인적사항	성별, 연령 직급, 근무년수 등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패방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를 받는 기관을 중앙부처(위원회 포함), 청 단위 행정기관, 시·도, 공직유관단체, 시·도 교육청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4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부패방지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감사관실 직원과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일반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630부를 배포하여 약 563개의 설문지를 회수(회수율 약 89%)하였고 이중 일부 항목을 누락한 설문지 11개를 제외하고 548개를 유효한 분석대상으로(유효회수율 약 87%)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Windows 17.0과 AMOS Graphics 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기관	배포	회수	무효	유효
총계	630부	559(88.7%)부	11(1.96%)	548(86.9%)부
A 중앙부처	30부	26부		26부
B 중앙부처	30부	20부		20부
C 중앙부처	30부	32부		32부
D 중앙부처	30부	30부	5부	25부
A 청	30부	36부		36부
B 청	30부	31부		31부
C 청	30부	25부	3부	22부
D 청	30부	23부	3부	20부
A 시도	50부	46부		46부
B 시도	40부	31부		31부
C 시도	30부	27부		27부
D 시도	30부	30부		30부
A 공직유관단체	40부	33부		33부
B 공직유관단체	30부	30부		30부
C 공직유관단체	30부	30부		30부
D 공직유관단체	30부	30부		30부
A 시도 교육청	20부	22부		22부
B 시도 교육청	20부	19부		19부
C 시도 교육청	20부	20부		20부
D 시도 교육청	20부	20부		20부

IV. 분석 결과

1.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회귀분석의 기본 절차인 주요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의 Cronbach's α 값은 정책내용 0.872, 총괄기관과 집행조직 간의 관계 0.876, 집행조직 0.890, 정책대상 집단 0.803, 정책환경 0.854, 집행효과 0.887로 나타나 모든 변수에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주요 변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1.0이상의 고유값을 갖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적재량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Varimax 방식을 통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0.5이상의 높은 요인 적재값을 기준으로 투입된 변수들을 요인별로 범주화하였다. 당초에는 집행활동을 총괄기관과 집행조직 간 관계의 측정항목으로 분류하였으나 분석결과 집행조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정책 대상 집단과 관련하여 범주화되지 않은 정책의 호감도 관련 설문 두 항목과 정책의 인지도 관련 한 개의 항목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 6, 7번(집행활동)이 집행조직으로 구분되었고, 정책대상 집단 2번(인지도)과 정책대상 집단 5, 6번(호감도)은 제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요인분석

성분 \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집행조직	총괄기관과 집행조직간 관계	정책내용	정책환경	정책대상집단
집행활동3-6	.652	.360	.085	.135	.210
집행활동3-7	.667	.331	.083	.164	-.480
기관장 관심 및 지원4-1	.696	.164	.177	.085	-.260
기관장 관심 및 지원4-2	.649	.214	.217	.098	.0540
집행자 의욕4-3	.772	.132	.126	.182	-.098
집행자 의욕4-4	.794	.138	.194	.187	-.100
집행자 태도 4-5	.778	.173	.168	.172	-.087

(다음 쪽에 계속)

성분 \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집행조직	총괄기관과 집행조직간 관계	정책내용	정책환경	정책대상집단
집행자 태도 4-6	.805	.168	.138	.060	-.113
집행자 능력 4-7	.804	.113	.120	.079	-.132
집행자 능력 4-8	.826	.157	.107	.067	-.144
집행자 능력 4-9	.758	.173	.187	.103	-.082
의사전달 3-1	.267	.643	.338	.090	.026
의사전달 3-2	.282	.691	.204	.090	-.106
의사전달 3-3	.312	.621	.357	.047	.030
집행지원 3-4	.194	.717	.318	.105	-.088
의사전달 3-5	.281	.672	.366	.094	-.019
집행지원 3-8	.219	.690	.243	.111	-.002
집행지원 3-9	.149	.706	.216	.123	-.076
의사전달 3-10	.209	.659	.322	.066	-.147
명확성 2-1	.255	.235	.678	.105	-.064
명확성 2-2	.227	.287	.651	.022	-.018
명확성 2-3	.111	.198	.724	.084	-.039
일관성 2-4	.142	.200	.754	.082	-.076
집행가능성 2-5	.183	.316	.697	.110	-.046
집행가능성 2-6	.123	.275	.684	.003	-.062
집행가능성 2-7	.186	.349	.706	.048	-.012
여론의 반응 6-1	.032	.223	-.084	.628	-.093
여론의 반응 6-2	.196	.001	.246	.734	-.125
정치적 관심과 지원 6-3	.146	.027	.175	.769	-.061
정치적 관심과 지원 6-4	-.006	.052	.036	.798	-.009
시민단체의 관심과 지원 6-5	.233	.080	.107	.684	-.167
시민단체의 관심과 지원 6-6	.146	.073	-.106	.729	-.100
정책인지도 7-1	-.209	-.099	-.169	-.259	.660
형태변화의 필요성 7-2	-.093	-.037	-.020	-.144	.846
형태변화의 필요성 7-3	-.107	-.071	-.016	-.218	.820

2. 주요변수에 대한 분석

1) 부패방지 정책효과

부패방지 정책효과는 사회의 투명성 제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집행자의 입장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의 원활한 집행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였다는 응답이 평균 3.72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부패방지 정책의 집행성과를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라는 응답이 평균 3.0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책효과에 대한 정책집행

담당자들의 인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부패방지 정책의 집행효과 중 외부효과인 사회투명성 제고나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비해 조직 내부에서의 집행만족도나 원활한 정책집행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투명성 제고	1	5	3.66	.801
행정의 책임성 제고	1	5	3.63	.767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1	5	3.72	.785
일반국민의 부패방지 정책집행 성과 인정여부	1	5	3.01	.854
부패방지정책 집행현황에 대한 만족도	1	5	3.25	.853
원활한 부패방지 정책집행	1	5	3.29	.822

2) 정책 내용

정책내용의 명확성은 평균이 3.28이고 일관성은 평균이 3.23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집행가능성은 평균 3.0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집행가능성과 관련한 개방형 질문에서도 내부공익신고제도, 부패신고 의무화와 같은 부패방지 정책들이 동료들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사회의 직장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부패방지 정책내용의 현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가 공익을 위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가치 있는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표 5〉 정책내용에 대한 인식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책내용의 명확성	1	5	3.28	.776
정책내용의 일관성	1	5	3.23	.777
정책내용의 집행가능성	1	5	3.05	.814

3)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

총괄조직과 집행조직의 관계에 대한 설문항목은 크게 의사전달과 집행지원으로 구분된다. 의사전달을 집행지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전달 중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내용이나 지침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항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지원과 관련한 설문은 정책집행을 위한 기술적 조언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구성되는 데, 기술적 조언을 인센티브 제공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정책집행과 관련한 표창 또는 선진외국 연수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한 집행지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6〉 총괄기관과 집행조직 간의 관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의사전달통로의 효율성	1	5	3.21	.820
의사전달을 위한 권익위의 노력	1	5	3.44	.821
의사전달의 효율성	1	5	3.38	.805
기술적 조언 등 집행지원	1	5	3.20	.778
사전협의 등 의사전달의 효율성	1	5	3.32	.834
인센티브제공 등 집행지원	1	5	3.07	.869
인센티브 관련 권익위 노력	1	5	3.19	.847
권익위 활동에 대한 호감정도	1	5	3.16	.927

4) 집행조직

집행조직에 대한 인식정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령 반영노력, 기관장의 관심, 집행담당자의 의욕의 경우 평균이 각각 3.94, 3.94, 3.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관대화 현상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7〉 집행조직에 대한 인식결과

구분	문항번호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집행활동	3-6	548	1	5	3.82	.834
제도개선 등의 법령 반영노력	3-7	548	1	5	3.94	.782
기관장의 관심	1	548	1	5	3.94	.854
기관장의 지원	2	548	1	5	3.82	.863
집행담당자의 의욕	3	548	1	5	3.96	.758
정책집행담당자의 의욕	4	548	1	5	3.85	.777
정책집행담당자의 태도	5	548	1	5	3.87	.765
정책집행담당자의 태도	6	548	1	5	3.91	.749
정책집행담당자의 능력	7	548	1	5	3.96	.767
정책집행담당자의 능력	8	548	1	5	3.90	.771
정책집행 담당자의 능력	9	548	1	5	3.76	.794
유효수 (목록별)		548				

5) 정책대상 집단

정책대상 집단에 관한 측정항목은 크게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부패방지 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행태변화의 필요성으로 구성된다. 응답분석 결과,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정책설명 필요성은 평균 2.39, 행태변화의 필요성은 평균 2.39, 그리고 설득할 필요성은 2.41로 나타났다.¹⁾

이러한 설문 결과는 정책대상 집단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정책대상자들이 아직도 부패방지 정책집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온정주의적 행태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1) 설문조사 시 응답순서는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순서였으나 설문 결과는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로 역코딩 하여 점수를 계산 하였다.

〈표 8〉 정책대상 집단 설문 결과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패방지정책 설명 필요성	1	5	2.39	.770
행태변화 필요성	1	4	2.39	.739
정책 대상자 설득 필요성	1	4	2.41	.781

6) 정책환경

정책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에 대한 중요성의 평균이 3.77로 가장 높고, 정치적 관심과 지원(평균 3.75), 시민단체의 지지(평균 3.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정책 환경 설문 결과

구분	문항번호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대중매체 보도 중요성	1	548	1	5	3.77	.799
여론의 흐름에 따른 정책집행 변화가능성	2	548	1	5	3.66	.881
시민단체 지지의 중요성	3	548	1	5	3.71	.845
시민단체의 비판의 영향력	4	548	1	5	3.64	.848
시민단체에 의한 정책집행 방향의 변화가능성	5	548	1	5	3.49	.852
정치적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	6	548	1	5	3.75	.846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책집행 방향의 변화가능성	7	548	1	5	3.70	.862
유효수 (목록별)		548				

3. 집행변수가 부패방지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책내용,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 집행조직, 정책대상 집단, 정책환경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회귀식($F=136.191$, $p<.01$)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을 VIF지수로 측정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허용 수준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된 R^2 값이 0.553으로 독립변수 전체가 집행효과에 대하여 약 5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변수별로는 정책내용,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 집행조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정책대상 집단은 음(-)의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정책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베타계수는 정책내용 0.362, 총괄기관과 집행조직 간의 관계가 0.271, 집행조직이 0.223로 정책내용이 부패방지 집행결과로 나타나는 정책효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집행변수가 정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786	.209		3.753	.000		
정책내용	.385	.043	.362	8.910	.000	.497	2.012
총괄집행기관 관계	.273	.044	.271	6.165	.000	.425	2.354
집행조직	.235	.039	.223	6.039	.000	.601	1.664
정책대상집단	-.092	.034	-.087	-2.709	.007	.787	1.270
정책환경	-.048	.035	-.046	-1.368	.172	.739	1.354

Adj $R^2=0.553$, $F=136.191$, 유의확률=0.000

정책환경이 부패방지 정책집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원인을 정책집행의 속성과 설문응답자의 특성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정책집행은 정책결정이나 수립과 다르게 일단 주어진 정책목표를 단순히 실행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정치적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에 비해서 정책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

2) 설문응답자는 약 64%가 6급 이하 공무원 등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 이다.

2) 집행조직에 미치는 영향분석

집행변수가 매개변수인 집행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회귀식($F=90.307$, $p<.01$)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VIF지수로 측정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허용수준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된 R^2 값이 0.395로 독립변수 전체가 집행조직에 대하여 약 4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변수별로는 정책내용,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 정책 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정책대상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베타계수는 정책내용이 0.115,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가 0.420, 정책 대상 집단이 -0.111, 정책 환경은 0.172로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가 집행조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집행변수가 집행조직에 미치는 영향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1.838	.217		8.462	.000		
정책내용	.116	.047	.115	2.455	.014	.503	1.990
총괄·집행 기관 관계	.403	.046	.420	8.791	.000	.485	2.060
정책대상집단	-.111	.037	-.111	-2.995	.003	.800	1.249
정책환경	.172	.038	.172	4.520	.000	.766	1.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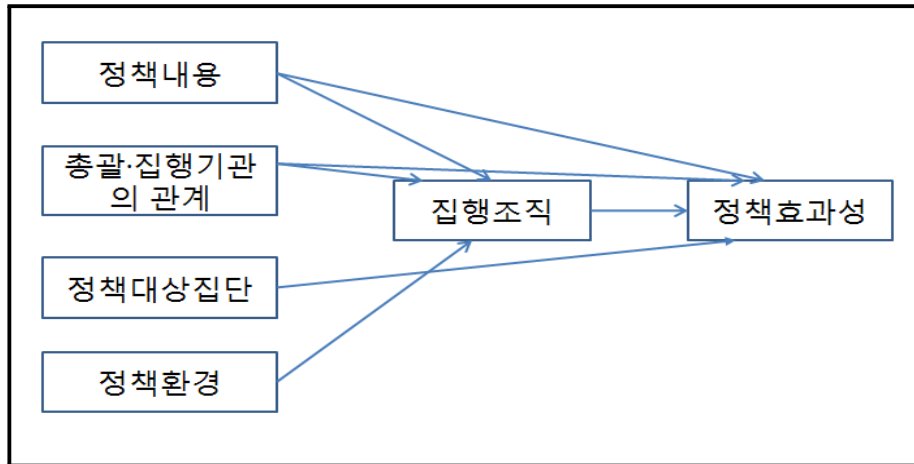
Adj $R^2=0.395$, $F=90.037$, 유의확률=0.000

3)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 효과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부패방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으로 부패방지정책 집행의 특성상 대부분의 정책이 각기 다른 집행조직을 통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조직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각각의 부패방지 정책의 집행변수가 집행조직을 통하여 정책집행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포함한 전체 효과를 분석 측정하고자 한다. 간접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경로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하여 <그림 2>와 같은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 집행변수가 정책효과에 미치는 경로분석



경로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인 χ^2 통계량은 10.837(자유도=2 유의도 0.004)이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그리고 CFI(Comparative Fit Index) 각각 .090, 0.993으로 제시되었다. 각각의 지수의 적합도 기준은 REMSEA는 .08~.10범위이고 CFI는 0.9이상이다. 따라서 본 모형은 적합도 지수를 충족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효과는 각 독립변수에 의해 약 55.4%가 설명되고 집행조직은 38.8%가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는 각 집행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집행조직을 거쳐서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분석결과 각각의 독립변수가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 외에 간접효과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여전히 정책내용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정책내용과 비슷한 수준 정도로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집행변수의 직·간접 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책내용	정책효과	0.388	0.362	0.026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		0.356	0.264	0.092
집행조직		0.215	0.215	-
정책대상집단		-0.072	-0.072	-
정책환경		0.047		0.047

V. 결론: 연구의 시사점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행정통제적 시각에서 행정 서비스의 공급자인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본 연구는 정책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부패방지 정책집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패방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집행변수 중에서 부패방지 정책집행의 결과인 정책효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내용으로 밝혀졌다. 정책내용을 구성하는 하위 변수인 명확성, 일관성, 실현가능성 중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질문에서도 설문 응답자는 정책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 의무화 등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정책내용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방향에도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정책이 현실성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평가의 근본 이유는 정책 자체 보다는 정책수단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패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인 부패신고 의무화와 같은 정책을 추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³⁾ 따라서 정책내용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

3) 이러한 견해는 정책 현실성과 관련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과도 일치한다. 참고로 설문의 응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조사권한이 없어 부패실체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단절이 발생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권한에 의존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하고 있는 데 평가권한에 의한 정책추진은 내

해서는 조사권이라는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노력과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책내용 다음으로 총 효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부패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보다 많은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변수이다. 첫째,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는 집행조직을 통한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정책내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이다. 둘째,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라는 변수는 크게 기관간의 의사전달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집행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변수보다 내생 변수적인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진 변수라는 점이다.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집행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집행과 관련한 기술적 조언 등 의사전달 활동을 강화하고 설문조사 결과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하위구성 변수 중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패방지정책 추진의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지원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되는 부처는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사회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행정통제적인 시각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만으로는 부패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부패문제에 대한 접근은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행정서비스의 공급자 이외에 수요자인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여 접근 할 수 있는 시각의 변화가 요구된다. 부패문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성남(2002), “역대정부의 부패통제정책: 평가와 전략모색,”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발표논문집」, 서울시립대학교.

실 있는 정책추진보다는 실적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흐름 가능성이 크다.’

- 구자용(1995), “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학술총서 52」, 전예원.
- 김병섭(1999), “부패통제방법의 변천과 방향,” 1999년도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 김상헌(2000), “정치주기와 공무원 부패,” 「한국행정학보」(34,3).
- 김영중(1993), 「부패학: 원인과 대책」, 숭실대출판부.
- 김종무·윤수재(2004), “공무원부패방지제도의 성공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세미나발표논문집(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제).
- 김해동·윤태범(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 김호섭(1991), “행정책임의 논리,” 「한국행정학보」(25,3).
- 국민권익위원회(2009), 「국민권익백서」, 국민권익위원회
- _____ (2010), 「국민권익백서」, 국민권익위원회
- 박영호(1999), “한국 부패통제에 관한 연구,”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서성아(2007), “부패실태 추이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6」.
- 서정환(2004), “건강검진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수잔 로즈 액커만(2000), 장동진의 3인 옮김(2000), 「부패와 정부」, 동명사.
- 안광현(2007),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안해균(1998),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연성진 외 4인(2007), 「부패사범 통제체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광재(2005),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05-01」
- 이선중(2009), “전자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행정학 박사 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이은영 외(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
- 이정주(2002), “건설부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 이홍균(1996),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집행사례를 중심으로,”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옥기(2008), “공무원 부패의 영향요인: 공무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임예순(2005), “정책집행의 성공요인 분석: 청계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장근호(2000),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경제·사회적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재정논총」(15.1).
- 전운기(2003),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과 개선,” 산업공학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경세원.
- 정관수(2007), “한국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3개 시군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황진영·강동관(2007), “국가별 특성에 의한 부패와 성장간의 관련성 검토,” 「비교경제연구」(14.1).
- Alexander, E. R.(1985), “From Idea to Action, Notes for a Contingency Theory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dministration & Society*(16.4).
- Berman, Paul.(1978), “The study of Macro and Micro-Implementation,” *Public Policy*(26.2).
- Edwards III, George C.,(1980), *Implementing Public Policy*,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Washington, D. C.
- Klitgarrd, Robert(1988), *Controlling Corrup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ley.
- Mauro, Paolo.(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110.3).
- Murphy, Mark J.,(1995), “International Bribery: An Example of an Unfair Trade Prctices?” *21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anl Law*.
- Pressmann, Jeffrey L. & Aron Wildabsky(1973), *Implemen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Rose-Ackerman, Susan,(1997), The political economy of corruption. in Kimberly Ann Elliot, ed., *corruption and global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DC.
- _____(1975), “The Economics of Corruption,” *Journal of Public Economy* (4).
- Sabatier, Paul P. & Daniel Mazmanian(1980),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A Framework of Analysis,” *Policy Studies Journal*(7).

- _____(1983),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 Scott, Foresman and Co., Glenview.
- Smith, Thomas B.(1973),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olicy Science*(4).
- Van Meter, Donald S. & Carl E, Van Horn(1975),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 Conceptual Framework," *Administrative Society*, February
-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2007/faq#general3